



HanSun Policy Brief

Hansun Foundation

2011. 05. 12

동반성장론 논쟁의 실체와 해결책

강태규(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실장)

본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브리핑자료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재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ww.hansun.org

〈요약〉

동반성장론이 관련 학계 및 재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유독 최근에 더욱 심화 되고 있는 보수·진보진영 간의 계층갈등, 이념갈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나와 있듯이 민간부분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나 정부는 동반성장의 문화 정착과 최소한의 조정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

동반성장론 논쟁의 발단과 내용

지난 3월 2일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새삼 동반성장론이 관련 학계 및 재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동반성장을 위해선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결국 대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찬성 입장과 초과이익의 정확한 산출도 어렵거니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좀 더 상술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유관 중소기업이 기여한 바가 상당부분 있으므로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방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용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

한 동반성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며, 몇몇 기업이 선도적으로 시행에 나가면 초과이익공유 문화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점 등을 내세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다른 주체와 공유하는 것은 세금 부과를 통해 이루어질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동반성장기금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며, 기금을 분배할 경우에도 그 대상과 주체 모두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반성장론과 관련된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얼핏 해묵은 성장과 분배 간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 성장과 분배 간의 정책적 조화를 위해 동반성장론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되었을 터인데, 새삼 ‘초과이익공유제’의 적극 추진 발언이 논쟁을 재점화 시킨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뒤늦게 ‘성과공유제’로 용어를 수정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가라앉지 않는 저변에는 단순히 용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아니 오히려 유독 최근에 더욱 심화 되고 있는 보수·진보진영 간의 계층갈등, 이념갈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인식 차이

작년 12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도 이

부분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는 탓에 그 설립 취지에서 애써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역할을 정리해놓았다. 우선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갈등에 대한 합의 역시 ‘민간부문’에서 도출하도록 하며, 그 결과로서 동반성장의 ‘제도’가 아닌 ‘문화’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논쟁의 근인(近因)으로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들 수 있겠다. 즉 기업 간의 갈등을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 역시 민간부문의 합의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자체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나마 현 상황에서의 미봉책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존재 자체보다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 점검, 발표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한다는 위원회의 주요사업이 이와 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 이면에는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2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비판 시각이 도사리고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사회주의로의 대체 가능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극히 일부 세력은 차치하더라도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와 이와 연계된 사회적 약자를 전면에 내세워 이들에 대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의 구제와 보호를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세력으로서의 동반성장론이 자신들의 논리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반성장론 논쟁의 실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반성장론과 관련된 논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시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반성장론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실효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일부 법적, 제도적인 보완만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둘째, 동반성장론은 현실적인 미봉책이며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음 동반성장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국가나 정부의 법적, 제도적 개입이 없어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경제적 약자나 이와 연계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는지? 둘째,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경쟁체제에서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

가나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규제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셋째 경쟁체제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와 보호는 강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보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역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바퀴는 원형이어야 한다. 그러나 논밭을 가는 트랙터의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원형만으로는 안 되며 자동차의 종류와 도로의 사정에 따라 그에 알맞은 홈을 새겨 넣어야만 안정성과 속도(효율성) 둘 다를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 바퀴를 우리의 경제시스템에 비유해 본다면 먼저 원형의 바퀴처럼 자유시장경제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시스템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체제가 있다고 보는가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대체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단지가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바퀴의 홈처럼 경제주체의 규모나 성장정도, 주변 국제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스템의 운용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동반성장정책이란 이 시점에서의 우리 경제의 규모와 수준에 맞는 경제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시행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성장(효율성)을 위한 분배(안정성)의 정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수준을 판단한 후 그에 합당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동반성장론 논쟁의 해결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논쟁이 일어난 데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귀결된다. 첫째, 동반성장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 간의 불신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반성장론이 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더라도 결국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 경제시스템으로는 국가나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상황이 극복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경제시스템의 적절한 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측간에 인정하고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규모나 수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차이가 있다. 셋째,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에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시행에 앞서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책의 취지와 시행과정을 미리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라고 지칭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진 발언은 의욕만 앞선 성급한 판단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끝으로 동반성장론과 관련된 논쟁이 확대되어 불거진 이유로서 정부기관의 엄정하고 공평한 감독과 규제의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반성장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즉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나와 있듯이 동반성장은 민간부분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할 사안이므로 동반성장위원회나 정부는 동반성장의 문화 정착과 최소한의 조정자 역할에 그쳐야

만 하며, 당사자 간의 부당한 거래에 따른 어느 한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법적 제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제안〉

- ✓ 시장경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 ✓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 정책 입안 시 공청회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 ✓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필자 | 강태규 Ph.D.

- 정치학 박사
-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실장
- (현) 한국외대 강사
- (전)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 (전) (사)나라정책연구회 정책실장
- (전) (사)문화문 사무처장